

# 광주 광산·전남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 연장한다

김영훈 노동부장관 ‘지역고용활성화법’ 상반기 중 마련키로  
지정기간 6개월 연장될 듯...고용유지지원금 등 우대 지원

정부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두 지역에 대한 지원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6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위기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실 명절 대비 확대 간부회의’에서 “오는 27일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된다”면서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장관이 직접 기간 연장 검토 의견을 밝히면서, 여수시와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유력시 된다. 연장되는 기간은 6개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조만간 발표할 신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간이 1년으로 설정됨에 따라, 여수시와 같은 기 지정지역의 혜택 기간을 6개월 연장해 형평성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는 광산구와 함께 지난해 8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로 지정된 최초의 지자체다. 여수시는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에서 우대 지원을 받고 있다.

휴업수당 지원 확대(최대 90% 보전),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증액(5년간 5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완화,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최대 2억5000만원) 등이다.

여수에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95개 사업장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6억3800만원의 지원을 받았다. 일용직근로자에게도 4200만원이 지원됐다.

정부가 여수시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데에는 여전히 열악한 석유화학산업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의 지난해 3분기 생산액은 18조 908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24% 감소했다. 수출량 역시 전년 3분기 보다 8.48% 줄어든 71억2400만 달러였다. 여수산업단의 지난해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52.1로, 70.7였던 지난해 4분기 보다. 18.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2분기 기준 고용률은 64.2%로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44%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 450억원은 올 1분기 내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여수시의 산업, 고용의 어려움에 공감한 것 같다”며 “고용위기 극복 측면에서 지정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날 지역고용활성화법을 통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고용활성화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 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대표수상자들에게 기념패를 주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지방이전 준비 서둘러야”

옳긴 기관 구내식당 만드는 대신  
직원 주변식당 이용 밥값 지원을  
독과점 시정위해 공권력 총동원

광주·전남 통합에 공공기관 이전 배려를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국가행정 전반에 있어 지방 우대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국토 공간의 균형적 이용은 경제의 성장판을 여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1극 체제’ 타파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교통 인프라 정비에도 속도를 내는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며 “기업의 지방

투자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옮기면 그 기관에는 구내식당을 만드는 대신, 직원들이 밖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밥값을 지원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다”며 “입찰 과정에서 지방생산 물품에 가점을 주거나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지방 제품을 우선해 쓰는 제도를 시행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독과점 시정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 삶의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이 밀가루·설탕 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사실을 거론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이든, 검찰이든, 행정 부서는 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가격조정 명령제도 등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통합을 하는 지역을 우선해 집중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시도통합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대대적으로 할 생각이며 이걸 따로 풀어놓으면 효과가 없다”며 “광역 통합을 하는 데는 좀 우선으로 더 많이 집중해서 보내면 유인이 생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방부, ‘DMZ 공동관리’ 美에 제안...유엔사는 일단 부정적

비무장지대(DMZ) 관할권 문제가 한미 간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국방부가 미국 측에 DMZ 공동관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km까지인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하고, 철책 남쪽은 한국군(국방부)이 관할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5일 한미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미국 측에 DMZ 관할권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고,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 한미 국방 당국 간 협의체에서도 의제로 다룰 것을 요청했다.

DMZ 남측구역 중 남측 철책 이북 지역은 계속 유엔사가 관할권을 갖고 인원 출입 때도 승인권한을 행사하는 대신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출입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 등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게 국방부의 구상이다.

앞서 여당이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

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통일부도 입법 지원에 나서자, 유엔사는 이 법안은 정전협정과 상충한다면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DMZ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강조했다.

국방부의 제안은 DMZ 관할권을 군사적, 비군사적 목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남측 철책을 기준으로 지역적으로 구분해 공동관리하자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다.

실제 남측 철책 이남에는 일반전초(GOP) 등에서 한국군 병력이 상주하고, 군 관계자들도 수시로 출입하고 있어 한국군이 관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국방부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74

광주일보 74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 광주문화신탁이

#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광주문화신탁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